

문명사적인 대격변의 시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최 재 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요약문

I. 들어가며

-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된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남.
-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됨.
※2022 국가 안보 전략(NSS)에서 미국은 향후 10년간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할 것을 선언.

II. 미중패권경쟁시대 국제질서의 변화

- 진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 경쟁의 영향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냉전적 안보 구도 강화
- 경제 안보 개념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가 안보에 귀속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미중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에너지, 첨단기술 등 경제적 요인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해지면서 경제안보의 개념이 확대됨.
 - 미중경쟁이 진영경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대표적이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나 반도체 과학법(CHIP and Science Act of 2022),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CRMA)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됨.
 -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공급망을 형성하며

번영을 추구함.

- 그러나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공산당 주도의 경제체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이념과 경제안보의 통합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 지난 50여 년간 형성된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림.
 -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서 형성되었던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과 이로 인한 상호의존성 및 초연결성의 증대는 오히려 경제적 취약성 증가,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

-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을 단절시키고 대서양동맹 및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강화함.
 -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제·에너지·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이 급진전함.
- 나토가 유로·태평양 안보 개념을 채택하여 전략 범위를 태평양까지 확대됨.
- 유럽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함. 첨단기술 디커플링 가시화됨.
- 우크라이나전쟁이 민주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대됨.

III. 미중패권경쟁시대 대중국 전략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전면에 내세움.
- 국력의 상대적 약화를 인지한 미국은 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를 본격화함.
- 경제적 봉쇄망: IPEF, IRA, CHIP4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첨단 기술유입 차단.
- 안보적 봉쇄망: 오키우스 출범.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나토의 활동 범위 유로-태평양으로 확장. 대만 무장.

□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

- 미국은 아메리카대륙의 패권국으로서 다른 대륙에서 지역 패권국이 출현하여 그 대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옴.
-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은 대륙의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대서양동맹을 통해 서유럽을 미국 편으로 견인하고, 러시아의 제국 건설을 막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NATO) 가입을 지원함.

-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도왔지만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본격화함.
- 결과적으로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하였고,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은 미중패권경쟁으로 나타남.

IV. 권위주의 국가 결집과 북중러 연대

□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 미국의 대유라시아전략은 대륙의 서쪽 끝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동쪽 끝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대결 구도를 형성했고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낳음.
- 중러 양국은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배격하고자 협력해 옴.
 - 중러는 유라시아 범위 내에서 상호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견제와 갈등 관계이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제정치·경제·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례없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역외 공격에 공동 대응함.
 -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이 함께 미국에 대항하기를 독려하면서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주도함.
 - 브레진스키가 예견한 중국·러시아·이란의 반패권 동맹은 이란이 2022년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현실화됨.
 - 중국은 2022년 SCO 정상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친러 국가 벨라루스와의 외교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SCO 개발은행 설립과 회원국 간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을 제안하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2022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확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기존 회원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 국가를 더 초대해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함.
- 중국이 평화주의자라는 정치적 이미지 확보에 주력함.
 -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 관계 개선 중재, 우크라이나전쟁 중재에 나서면서 평화주의자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킴.
 - 오히려 중러관계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위주의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 중러 연대의 향후 방향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을 높이고 미중패권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대되는 등 중국의 대외전략에 제약 요인을 형성하였지만, 중국은 미국과 경쟁 상황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미국에 함께 대항할 러시아가 필요함.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
 - 양국 관계가 내포한 잠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반패권주의 연대, UN 안보리 차원의 협력, 브릭스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탈달러화 공동전선 구축, 국제기구 내 협력, 대만 통일에 대한 지지, 한반도 정세에 공동대응, 국경 안정 등이 중러 협력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임.

- 중러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점차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중러 긴밀화의 이점이 한계성을 압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긴밀화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고 권위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임.

V.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 (대만)

□ 대만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복합적 갈등 존재

■ 미중패권경쟁의 지정학적 교두보

- 미국 :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 민주주의 연대의 리더 국가로서 대만 민주주의 수호,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의존도 높음.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생태계가 완성될 때까지 반도체 수급에 대한 대만 의존 절대적임.
- 중국: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상정함.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의 정당성 확보,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애국주의 고취.

■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접점

- 중국이 지역패권국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연합 형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높음.

□ 대만해협의 위기 고조

■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과 중국의 대만통일 의지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임.

-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대만에 전례없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거듭 승인하며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함.
- 대만은 미국의 무기 지원 및 자체 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향상시키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통일이 역사적 과업이며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함.
-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무력통일 리허설’이라 불릴만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 4월 예정된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이 또 한 번 양안 관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전현직 대만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74년만에 방중
- 2023년 1월 대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양안 관계에 큰 영향 미칠 것임.

■ 2023년 3월 오커스(AUKUS)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최대 5척까지 판매하기로 결정함.

-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겨냥해 인도 시기를 10년 앞당김.
- 차세대 핵잠수함 공동 개발 계획 발표

■ 미국, 필리핀에 군사기지 4곳 추가 사용.

- 1991년 미군 주둔 연장안 부결 이후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 2016년 오바마

전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공군기지 4곳과 해군기지 1곳을 10년간 사용 합의하여 미군 재주둔.

- 2023년 2월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 장소는 대만과의 거리 200마일(약 321km)에 있는 루손섬 북부와 팔라완섬 군사기지 유력.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미군 병력 투입 용이.

■ 일본 재무장 촉진

-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2024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45조 엔(약 421조~441조 원) 규모로 책정할 예정임.
- 北 미사일 고도화 대만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중러 견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 등을 이유로 헌법 9조 수정 개헌안에 대한 일본 내 지지가 높아짐.

■ 우크라이나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 한반도의 냉전적 구도 형성은 미중패권경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미중의 안보적 대립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커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활 이익이듯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임.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대만해협의 긴장은 완화와 고조를 반복하면서 차츰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임.

■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주한 미군의 참전, 1961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북한의 참전, 한미일 안보 공조에 따른 한국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임.

■ 우크라이나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듯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이 연루되거나 한반도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IV.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은 가치외교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해야 함.

-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함.

■ 한국은 5년 만에 한미안보훈련을 재개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

■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로써 국격에 맞는 기여를 통해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증진, 보편적 가치 중시,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통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들이 함께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국은 중국을 중요한 협력 국가(key partner)로 언급했지만, 한중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구체적인 전략 대부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와 매우 유사함.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안정 및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미국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역내 다자간 연합훈련 참여 및 QUAD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왔던 역내 전통안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음.

■ IPEF와 칩4 동맹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음.

□ 한국은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함.

■ 미·중·일·러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임.

○ 강대국의 힘이 대립하는 중간국이라는 점, 구조적 안보 제약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전략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 등

○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완충지이자 미·중·일·러의 균형점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지역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

○ 미국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 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유럽의 안보협력체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됨.

○ 지정학적 위험이 큰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하게 균형점을 이동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더라도 중간국은 핵심 이익을 침해당한 강대국으로부터 더 큰 안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

2. 한반도 안보 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는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함.

□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함.

■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해협에서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임.

○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임.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중간국의 외교적 실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음.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완충지 확보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통치를 결정. 소련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을 도왔으며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함.

※ 1950년 10월 1일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북한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응하면서 북중의 혈맹관계가 형성됨.

※ 1953년 북한, 중국, 유엔군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중임.

□ 한국은 어려운 안보적 상황에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함.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임.

3. 한국은 안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경쟁력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쟁임. 미국·대만·중국·일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 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잡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도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IPEF와 CHIP4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미국과 유럽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함.
 - 한국 정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 정부가 2042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 전국 15개 지역을 국가 산단으로 조성.
 -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약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 기업 투자 전폭 지원.
 - 삼성전자 20년간 용인에 300조 원 규모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 조성 계획, 지역균형 발전 위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거점에 10년간 60조 원 투자 발표, (반도체 패키징, 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

□ 반도체 산업 경쟁력으로 대만의 지경학적 가치 상승

-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대만의 생명줄임.
- 대만 정부는 정부 주도로 1974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세워 1987년 TSMC가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북부, 서부, 남부에 첨단과학 기지 13곳을 반도체 벨트로 건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함.
 - 최근 대만 정부는 ‘산업혁신법 개정안’ 의결-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 설비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액
- 대만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지경학적 가치를 높임.

□ 신냉전 시기 특징

-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의 기저에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깔려 있음.
- 냉전 시기에도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고,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도 인도와 같이 중립을 지키거나 터키·이스라엘과 같이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전 세계가 정확히 양분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움.
 - 여기에서 말하는 중립도 정확히 양쪽 극단에서의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많은 국가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한 편으로 치우치긴 하되 양극단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

라 한쪽 편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임.

○ 또한, 한 나라의 좌표 설정도 이념, 경제, 안보적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가변적임.

■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서방을 중심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 대러 제재 동참에 비서구 세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함. (대러 제재 참여국 33개국)

○ 미국과 서방의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 집단이 예상보다 광범위함.

○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은 세계 질서 혼란 속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함.

○ 미국은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가진 강대국이지만 상대적 영향력 축소의 영향으로 동맹국에 협조를 구하는 리더로 귀환함.

■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가 한반도 안보와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중러와의 위기관리에도 집중해야 함. 북중러 연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함.

■ 양 진영의 경계가 명확했던 냉전시기와 달리 신냉전기는 그 경계가 흐릿하며 국익에 따라 좌표의 설정과 변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냉전시기와 같이 한 편에 가담한다고 해서 강대국에 안보적 책임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기에 외교적 좌표 설정에 매우 신중해야 함.

■ 따라서 신냉전기에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중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편을 동조하여 다른 한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스스로 강해지기(自強)를 선택하고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섬세하고 명민한 외교전략을 마련돼야 함.

서론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된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을 단절시키고 대서양동맹 및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강화했으며 나토가 유로·태평양 안보 개념을 채택하여 전략 범위를 태평양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이 민주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제·에너지·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이 급진전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등의 변화를 추동했고, 진영 경쟁으로 확장된 미중 경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냉전적 안보 구도를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메리카대륙의 패권국으로서 다른 대륙에서의 지역 패권국 출현을 극도로 경계해왔던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은, 대륙의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하였고,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은 미중패권경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대유라시아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브레진스키가 예견한 중국·러시아·이란의 반패권 동맹은 이란이 2022년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현실화됐다. 중국은 2022년 SCO 정상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친러 국가 벨라루스와의 외교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SCO 개발은행 설립과 회원국 간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을 제안하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2022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확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기존 회원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 국가를 더 초대해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했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국제 정세의 혼란기를 자국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 삼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패권정책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노동신문에 대서특필하며 조중 친선을 강조하는 등 북중·북러 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공급망을 형성하며 번영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공산당 주도의 경제체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이념과 경제 안보의 통합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전략으로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력의 상대적 약화를 인지한 미국은 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를 본격화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과 중국의 대만통일 의지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의 안보적 대립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커지고 있다.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대만에 전례없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거듭 승인하며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다. 대만은 미국의 무기 지원 및 자체 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향상시키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통일이 역사적 과업이며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무력통일 리허설'이라 불릴만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할 이익이듯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대만해협의 긴장은 완화

와 고조를 반복하면서 차츰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 한반도의 냉전적 구도 형성은 미중패권경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은 주한 미군의 참전, 1961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북한의 참전, 한미일 안보 공조에 따른 한국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듯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이 연루되거나 한반도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냉전이라는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헤쳐나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가치외교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5년 만에 한미안보훈련을 재개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IPEF와 칩4 동맹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중·일·러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유럽의 안보협력체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해협에서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완충지 확보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통치를 결정했고, 소련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을 도왔으며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북한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응하면서 북중의 혈맹관계가 형성됐다. 1953년 북한, 중국, 유엔군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중이다.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중간국의 외교적 실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어려운 안보적 상황에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한국은 안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경쟁력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쟁이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 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대만의 생명줄이다. 대만 정부는 정부 주도로 1974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세워 1987년 TSMC가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북부, 서부, 남부에 첨단과학 기지 13곳을 반도체 벨트로 건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지경학적 가치를 높였다. 한국도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IPEF와 CHIP4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의 기저에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깔려있다. 냉전 시기에도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고,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도 인도와 같이 중립을 지키거나 터키·이스라엘과 같이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전 세계가 정확히 양분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립도 정확히 양쪽 극단에서의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많은 국가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한 편으로 치우치긴 하되 양극단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한쪽 편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좌표 설정도 이념, 경제, 안보적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가변적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경계가 명확했던 냉전시기와 달리 신냉전기는 그 경계가 흐릿하며 국익에 따라 좌표의 설정과 변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냉전시기와 같이 한 편에 가담한다고 해서 강대국에 안보적 책임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기에 외교적 좌표 설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신냉전기에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중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편을 동조하여 다른 한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스스로 강해지기(自強)를 선택하고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섬세하고 명민한 외교경영(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II. 미중패권경쟁의 확장

1)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회복 및 동맹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주창했다. 이는 미국 국력의 한계를 인지하며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미다. 2021년 2월 19일 제57차 뮌헨안보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맹의 현실주의적 도전으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정했다.¹⁾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복원은 환영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상정하고 공동대응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었다. 2021년 2월 19일 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1)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중·러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찾을 것을 요구하며 “대서양 양쪽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²⁾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의 안보 구조 재건은 ‘러시아와의 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동맹 및 대서양동맹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럽의 경제·에너지·군사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급진전하였다.³⁾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수급에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⁴⁾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다방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과 공동전선을 펴게 됐고,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에 편입되었다.

미국은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군사동맹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재난 대비, 기후위기 대응, 해양 안보 등을 내세운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⁵⁾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오커스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호주와 브렉시트(Brexit) 후 아태지역 안보에 역할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성되었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⁶⁾는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다룰 다자 경제 협의체로 중국을 역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⁷⁾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특별히 기술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해온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대만과 한국에 의존해왔다. 미국은 2022년 미국 반도체 회사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 Act)’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5년 이내에

2) Melissa Eddy, “Merkel calls for common strategy in dealing with China and Russia,”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3) Karen Deyoung, Michael Birnbaum, “U.S., allies plan for long-term isolation of Rus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4/16/us-nato-isolate-russia/>

4) 2022년 9월 27일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발틱 파이프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인 IGB(Interconnector Greece-Bulgaria)가 2022년 10월 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억 4천만 유로(약 3천 390억 원)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리스로 연결된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TAP)에 IGB를 연결하여 연간 최대 30억 m³의 가스를 동남부 유럽으로 공급한다. 독일은 5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으며 첫 LNG 터미널이 신축되면 올겨울부터 러시아 수입 천연가스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의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면 노르트스트림1 수송량의 절반인 연간 250억m³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5)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6)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다자경제협의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적 성격을 가지며 IPEF 참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7) 최윤정,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정세와 정책』 2022 3월 제15호.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미국이 미국(설계), 한국(생산), 대만(생산), 일본(소재·부품·장비)이 참여하는 ‘칩4동맹’을 제안한 것도 자국이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추 때까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확보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은 2022년 6월 24일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지역에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 퍼시픽 파트너(PBP)’를 결성했다. PBP는 2022년 4월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군 병력 및 군함, 무장경찰을 골자로 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600만 달러(약 875억 원)의 차관을 통해 화웨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29일 국무부 청사에서 최초로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U.S. Pacific Island Country Summit)’를 개최해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과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⁸⁾ 중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면서 미중 경쟁이 연평균 성장을 1% 미만, 인구 25만 명 내외인 남태평양 도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구상’을 발표했다. GIP는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덫에 빠지게 하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 미중의 경쟁에서 진영 경쟁으로 : 중국의 선택지 축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전략으로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 등을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⁹⁾을 강화해 왔다. 냉전 종식 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리면서 고속 성장했고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유럽이 중·러를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중패권경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 대결로 확장되었다.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국가의 결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2022년 9월 독일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로 인권 침해 등 중국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수는 없다면서 새 무역 상대를 찾고 중국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¹⁰⁾ 영국산업연맹(CBI) 사

8)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은 미·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십 강화, 태평양과 세계 연결성 강화, 기후 변화 및 21세기 도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태평양 섬 주민 번영 등을 핵심으로 하며 태평양 도서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8억 1000만 달러(약 1조 161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역 인재 개발을 위한 대학 간 펠로십 프로그램 수립, 태평양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1억 3000만 달러(약 1864억 2000만 원) 규모 투자 및 4억 달러(약 5736억 원) 규모 민간 투자도 포함됐다. (Jack Stone Truitt, “U.S. warns of China threat in first Pacific islands strategy,”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U.S.-warns-of-China-threat-in-first-Pacific-islands-strategy> (검색일: 2022.10.1.)

9)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무총장 토니 댄커는 대중국 강경론을 내세우는 영국 정치권에 발맞춰 재계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지만 저렴한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¹¹⁾ EU는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하여 배터리의 유럽 생산을 지원했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배터리 여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유럽 반도체법(Chip Act)’¹²⁾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4일 리튬과 희토류 등 원자재의 탈중국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 주요 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 제정을 선언했다. 원자재 확보의 새로운 파트너로는 호주·인도·칠레·멕시코·뉴질랜드를 언급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원자재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과 조율되지 않은 솔츠 총리의 방중(2022.11.4.)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솔츠 총리의 방중 시기는 부적절하고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며 동시에 EU 통합을 위태롭게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종속이 유럽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또 다시 유럽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약한 고리가 독일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3기 출범 이후 G7 국가 지도자 중 처음으로 방중한 솔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이고, 독일은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탈동조화를 반대한다”면서 독일은 중국과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양국 기업이 서로 투자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¹³⁾ 솔츠 총리는 11월 4일 프랑크푸르트알레마이너차이팅(FAZ)에 실린 기고문에서 “독일과 EU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기보다 자체 회복력을 강화하고 실용주의 기반으로 현명하게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EU가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묘사한 것은 적절하며 최근 수년간 증가해 온 경쟁적 요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 공동이해가 걸린 문제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부분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⁴⁾

중국과 유럽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미중패권경쟁에서 유럽이 중립적 위치에 있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과 외교적 입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중국은 유럽으로 일대일로를 확대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¹⁵⁾ 중국은 우

10)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new-china-policy-will-not-be-naive-economy-minister-2022-09-13/> (검색일: 2022.9.15.)

11)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7081b385c0c6> (검색일: 2022.8.5.)

12) EU는 총 450억 유로(약 63조 원)의 공공·민간 투자·지원과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9%인 유럽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중국은 솔츠 총리의 방중 기간에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에 대한 구매 계약(약 24조 550억 원 상당)을 체결했고, 독일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BMW는 11월 11일 BMW 배터리 생산 공장인 랴오닝성 선양시 리디아 공장에 100억 위안(1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고은, “솔츠 다녀간 뒤...BMW, 中전기차 배터리공장에 1조 9천억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048600074?input=1195m>) (검색일:2022.11.15.)

14) 이율, “독일 총리 ‘분단 경험 독일, 중국 중심 블록형성 원치 않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05900082?site=mapping_related (검색일: 2022. 11. 4.)

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이 가까워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솔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핵심 이익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진영 대결 등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유럽이 경제보다 안보를 선택해 제1 교역국 중국과 급격한 탈동조화를 강행할지, 협력의 비중과 방향성을 조정해가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경제협력 비중을 조절하여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및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프라 투자 등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¹⁶⁾ 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유럽의 중국 견제로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 향하는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의 확장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7년의 노력 끝에 중국과 EU가 합의한 ‘중-EU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범위와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¹⁷⁾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선택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3) 미중패권경쟁의 지정학적 교두보, 대만

대만은 미국이 중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사수해야 할 지정학적 교두보이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경쟁의 최전방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1982년 ‘대만관계법’에 관한 갈등을 해소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대립의 전면에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을 내세우며 대(對)대만 정책에 포괄적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8일 방영된 CBS ‘60분(60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을 투입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답해 대만 문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에 최소한의 방어적 무기만 판매하던 미국은 트럼프 전 정부 들어 2019년 4월 100억 달러(약 12조 4천 4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동년 5월에 미국 하원이 대만의 나토 참여와 무기 및 군수물자 등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2019 대만보 증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6월 첫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R)’에서는 대만을 미국의 우방으로 표기하고 대만의 자기방어 능력을 위해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

15) 2020년 EU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5,860억 유로(약 780조 6,000억 원)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EU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Silvia Amaro, “China overtakes U.S. as Europe’s main trading partner for the first time,” <https://www.cnbc.com> (검색일: 2022.7.2.))

16) 최근 ‘차이나시티’를 표방하던 독일 항구 도시 뒤스부르크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야심차게 추진 하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단했다. 뒤스부르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한 벨라루스 민스크 물류단지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함부르크 항만 지분 참여는 미국과 담당부처의 반대에도 솔츠 총리의 주장대로 허용했지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에서 24.9%로 축소됐다. (윤고은, “독일의 ‘차이나 시티’ 뒤스부르크, 화웨이와 사업 중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77900074> (검색일: 2022.11.10.))

17) 2021년 3월 23일 EU, 영국, 캐나다, 미국이 중국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제재에 중국이 맞 제재를 하면서 CAI에 대한 EU 의회 비준을 보류했다. 2022년 4월 EU는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중국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CAI 비준은 무기한 보류됐다. 2022년 7월 19일 중-EU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CIA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원론적 사항만 확인했다.

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⁸⁾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8월 7억 5000만 달러(약 9천억 원), 2022년 2월 1억 달러(약 1천 2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2022년 9월에는 '대만 관계법'을 보완하는 취지의 '안보 지원 대만법(Taiwan Policy Act, S.4428)'¹⁹⁾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연이어 대만을 방문해 정치·경제·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대만을 방문해 '대만은 이미 독립국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선언했다. 6월 27일에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공급망·수출통제 분야의 경제협력체인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도 출범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12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신장, 티벳, 홍콩 등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²⁰⁾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해협 긴장을 한 단계 심화시켰다. 강대국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에 대한 개념화와 공식화 등을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결정해 온²¹⁾ 중국 정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대만 영해를 침범해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보다 더 대만 근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침해에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경고를 보냈고, 중국은 대만을 통제할 수 있고 무력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협력에 반발해 군용기의 빈번한 중간선 침범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순찰을 통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 무력시위의 상시화,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년 만에 '무력사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만백서'를 발행하고 대만에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다.²²⁾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181개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고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면서 완전한 통일만이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중국 내정 간섭이나 통일 대업을 막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역사의 수레바퀴에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²³⁾

중국에 대만 통일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직후부터 군현대화와 해군 양성에 주력해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인민해방군 해군은 미 해군보다 60척 많은 3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4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0년간 세

18)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19) 안보 지원 대만법(Taiwan Policy Act, S.4428)은 대만을 비(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5조 8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2.10.12.)

21)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 43-44쪽.

22) 정재홍, 이동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세종정책브리프』, 2022-06, 4쪽.

23) 배인선, "[펠로시 대만 방문 후폭풍] 중국의 '종합세트'식 반격...군사·경제보복 '전방위'."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3111112942> (검색일: 2022.8.10.)

계획에 편승한 해운사들이 중국 CSSC(중국국영선박조선소)에 저가의 대형선박을 발주해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²⁴⁾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2년 9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실했고, 중국과 핵무기 경쟁도 의미가 없으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²⁵⁾

미중의 갈등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고, 대만은 미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과 자체 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2022년 9월 21일 열린 국방 및 군 개혁 행사에 참석하여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활 이익이듯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대만 해협의 긴장은 완화와 고조를 반복하면서 차츰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 Address by the President Vladimir Putin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en.kremlin.ru> (검색일: 2022.3.18.)
-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 (검색일: 2022.9.15.)
-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5.1.)
-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 H. Mackinder, *Democratic Ideas and Reality*, New York: Norton, 1919.
- Humeyra Pamuk, Dmitry Antonov, “U.S.responds to Russia security demands as Ukraine tensions mount.”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ays-destructive-sanctions-wouldnt-hurt-putin-person> (검색일: 2022.2.2.)
-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 (검색일: 2022.8.5.)

24) 유용원, “붕어빵 찍어내듯 함정 15척을 동시에...중국 초고속 건조 비결,”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12/2022091200231.htm(검색일: 2022.9.11.)

25) Michael E. O’Hanlon, Melanie W. Sisson, and Caitlin Talmadge, “Managing the risks of US-China war: Implementing a strategy of integrated deterrence,” <https://www.brookings.edu> (검색일: 2022.9.10.)

- Karen Deyoung, Michael Birnbaum, "U.S., allies plan for long-term isolation of Rus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4/16/us-nato-isolate-russia> (검색일: 2022.4.26.)
- Ted Galen Carpenter,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https://www.cato.org/commentary/ignored-warnings-how-nato-expansion-led-current-ukraine-tragedy> (검색일: 2022.5.20.)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29권 1호 (2020), 46쪽.
- 장세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대유라시아 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6.24.)
-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118-119쪽.
- 홍완석, 「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시사점」, 『외교』, 제141호 (2022), 119-120쪽.